



주간통일정세 2008-35(2008.08.25~08.3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3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마음먹으면 언제든 위성발사 가능(8/31,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8/30, 통일신보)**

- 평양방송은 31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1호 발사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북한)는 마음만 먹으면 목적인 실용위성을 성과적으로 임의의 시각에 쏘 올릴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주장
- 통일신보도 ‘광명성 1호’ 발사 후 10년간 “공화국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면서 “(이 기간) 자위적 전쟁억제력이 훨씬 강해졌다”고 강조

● **노동신문, 주민 사상교육 강화 촉구(8/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사회주의의 변질”이 곧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된다며 주민 사상사업의 강화를 촉구, 신문은 논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나가야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지를 강화”할 수 있다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째 잡아먹게 된다”고 주장

● **9·9절 기념 사면 대폭 축소(8/29, 좋은벗들 소식지)**

- 북한 당국이 정권 수립 60주년(9.9)과 노동당 창당 63주년(10.10)을 기념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사면이 당초 예상과 달리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9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00호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재판소는 당 중앙위원회 지시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사회적 범죄자들에 한해 형기를 1년정도 감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이미 작성됐던 대사면 대상자 초안은 모두 취소”돼 “실제 풀려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北, 6·15-10·4선언 입장-이산가족상봉 연계(8/29,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 조선적십자회(북적) 중앙위원회는 29일 통일부가 주관한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에 대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중단시킨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가소로운 잔꾀이며 어릿광대극에 불과하다”고 비난



- 북적 중앙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내고 “더우기 엄중한 것은 남조선 당국이 이산가족들을 위로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번 행사를 우리(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극단한 반공화국 선전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미국 민주주의가 국제기준 아니다(8/2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9일 민주주의는 수출이나 수입할 수 없고 미국과 같은 특정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
- 매체는 북한식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에게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혁명의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그런 민주주의가 “선군정치에 의해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

● 9.9절 앞두고 “총돌격” 촉구(8/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정권 수립 60주년(9.9)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모든 청년들에게 “강성대국의 높은 영마루를 향해 총돌격해 나가자”고 촉구, 신문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청년들의 영웅적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자’는 제목의 ‘청년절(8.28)’ 기념 사설에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새로운 비약의 진격로를 힘있게 열어 짓혀야 한다”고 강조

● ‘개혁·개방거부’ 김정일 발언들 소개(8/27,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대량아사가 발생하던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때 개혁·개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
-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김 위원장이 1996년 2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 글귀가 쓰인 배경대가 사용된 집단체조 ‘장군님 따라 붉은기 지키리’를 본 후 한 간부에게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 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이다”고 말했었다며, 이는 “아무리 엄혹한 정세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변함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장군님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한 장엄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주장

나. 경제 관련

● 식량 자급자족 강조(8/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은 식량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식량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을 먹여살리고 경제를 안정발전시키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문제”라고 언급
- 신문은 이와 함께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강화하는 것”도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덧붙임.



● ‘아리랑 열차’ 특별 운행(8/30, 노동신문)

- 북한이 정권 수립(9.9) 60주년을 맞아 공연 중인 집단체조 ‘아리랑’에 매일 수만 명이 관람하고 있으며 지방 주민들을 위한 ‘아리랑 열차’가 특별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 노동신문은 아리랑 공연이 “지난해에 비해 관람 열기가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관람자 수는 매일 수만 명을 헤아린다”며 지방 주민들이 아리랑 공연 관람차 손쉽게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아리랑 열차가 올해에도 또 다시 편성돼 활발히 운행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또 외국인 관람객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영국, 덴마크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의 관람자들도 계속 찾아오고 있다”고 주장

● 北농업성, 올해 농사 6개월치 식량도 자신 못해(8/28, 좋은벗들 소식지)

- 북한 농업성이 8월 7일 올해 농사 실태를 보고하는 회의에서 “올해 농사를 잘 해봤자 우리 나라(북한) 전체 인구의 6개월분 식량(가을 곡물 생산량 180만t)을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8일 주장
- 북한 농업성이 “올해도 날씨 조건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며 “황해남도, 강원도 등은 수해 때문에, 함경남도는 날씨가 가뭄에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소식지는 이러한 농업성 보고에 “올해 총력을 기울여 흥남 비료 공장을 만가동해 모든 도(道)에 비료를 공급했는데, 왜 농업성에서 큰물(홍수) 피해 대책을 사전에 못 해놓는 것이냐”, “큰물도 큰물이지만, 가뭄이 올 것에도 대비해서 양수설비를 갖춰놔야 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냐”는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질책과 비판이 쏟아졌다고 보도

● 北 식량 매점매석 무역업자들 처형(8/28, 좋은벗들 소식지)

- 북한에서 식량을 매점매석했다가 가격이 급등한 뒤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이를 착복한 혐의로 무역회사 책임자들이 7월 비공개 처형됐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7일 보도
- ‘오늘의 북한 소식’ 제198호에서 7월 15일 함경북도 청진시 남강관 매소장 리홍춘를 비롯해 무역회사 사장 3명 등 총 5명이 비공개 처형됐다고 주장하고 “리씨는 작년에 쌀을 대량으로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쌀값이 오르자 몰래 방출해 막대한 이윤을 남겼으며 이를 모두 착복했다”고 언급

● 北, 검덕광산 시설 확장공사 완료(8/27, 조선중앙방송)

- 노무현 정부 때 남북 협력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던 북한 함남 단천시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광석 운반계통 능력확장’ 공사가 끝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 북한 최대의 납·아연 생산지인 검덕광산은 26일 전승훈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을 열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축하문을 보내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언
 - * 금골광산으로도 불리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납·아연 매장량은 3억t으로 추정되고, 연간 생산능력은 납 5만2천t, 아연 12만4천t으로 북한 전체 생산량의 47%를 차지

● 北, 평양326전선공장 설비 현대화(8/26, 조선신보)

- 북한의 평양326전선공장이 최근 알루미늄 연속주조 공정을 자체적으로 현대화, 생산성을 2배 이상 향상시켰다고 조선신보가 26일 보도
- 북한에서 공장 현대화의 표본으로 유명한 평양326전선공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5년 11월 시찰했으며, 외국 인사들의 방북 시 주요 참관코스임.
- 평양시 평천구역에 있는 이 공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종합적인 전선 생산기지로, 6개 직장(職場)에서 나전선, 에나멜동선, 절연선, 차폐선, 고무절연고무보호선, 수지전력케이블을 비롯한 각종 전력, 통신 케이블과 여러 가지 전자기구 연결선을 생산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약 1천500명 정도임.

다. 군사 관련

● 한·미, 8월 北공중정찰 180여회(8/31, 조선중앙통신)

- 국군과 주한미군이 8월 한달 북한에 대한 ‘공중정탐’을 180여 차례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주장, 조선중앙통신은 ‘군사 소식통’을 인용, 국군과 미군이 북한 지역에 대해 실시한 공중정탐이 각각 70여회와 110여회에 달한다면서 이는 북한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 야망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을지연습, 핵문제 해결에 그림자(8/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최근 종료된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 군사연습을 북한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핵문제 해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끼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6자회담의 정신에 배치”되며 그 목적이 “전쟁도발 구실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미 호전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주적 권리”라고 덧붙임.



라. 사회·문화 관련

- **김정숙 형상화 모자이크 벽화 건립(8/31,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고(故) 김정숙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가 금강산 지구에 건립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보도

- **김만유병원 심장외과 집중 지원(8월호, 금수강산)**
 - 북한 당국은 평양 김만유병원의 심장외과를 심장외과 연구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능한 의료일꾼들을 선발배치”하고 “값비싼 심장 수술설비들을 마련”해주는 등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금수강산’ 8월호가 소개

- **봉수교회 개건 후 교인 증가(8월호, 금수강산)**
 - ‘금수강산’ 8월호는 평양 봉수교회가 재건축됐으며 “교회당이 개건된 후 이곳을 찾는 외국인과 해외동포, 교인들의 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 잡지는 봉수교회 소속으로 “전도사 김영순”의 말을 인용, “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 10시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기본 신앙생활인 주일 예배가 열린다”고 언급

- **초등학교 컴퓨터·영어수업 준비완료(8/20, 조선신보)**
 - 북한이 9월부터 소학교(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컴퓨터와 영어 수업 준비가 끝났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 북한은 2008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존 중학교(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던 컴퓨터와 영어교육을 2년 앞당겨 소학교 3학년부터 가르칠 계획

- **北농촌, 추수대비 농기계 정비 한창(8/2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걷이 전투를 앞두고 농기계와 농기구 수리·정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며 연백 평야를 비롯해 주요 곡창인 황해남도 농촌들은 부속품을 자체 확보해 트랙터 수리를 끝마쳤고 전기를 쓰지 않는 탈곡기를 수천대 제작했다고 사례를 보도

- **올림픽 메달리스트 경기 편집방송(8/2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8일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경기 장면만 따로 편집해 방송, TV는 1999년 애틀란타 대회 이후 12년간 노골드에 그친 북한에 금메달의 갈증을 풀어준 여자역도 63kg급 박현숙의 경기를 맨먼저 내보내었으며 또한 여자체조 도마에서 우승을 차지한 홍은정의 경기도 방송



● **北정권수립 60주년, 상점도 ‘화려하게’(8/28, 조선신보)**

- 평양시내 상점들이 정권 수립 60주년(9.9)을 앞두고 화려하게 변모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 조선신보는 28일 “평양시안의 공업품, 식료품, 과일·남새(채소)상점을 비롯한 상업봉사 단위의 면모가 일신됐다”고 소개, 각 매장에서는 진열대와 매장, 창고 등의 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꿈.
- 평양시인민위원회 관계자는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상업봉사 단위에서 일제히 진행한 꾸리기 사업은 다가오는 명절(9.9절)에 즈음하여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 **조선체육대학, 세계적 명수들의 산실(8/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창립 50돌을 맞는 조선체육대학, 세계적 명수들의 원종장(原種場)’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1958년 9월 1일 평양체육대학으로 창립됐다가 1980년 현재 이름으로 개칭된 이 대학은 “나라의 체육부문 지도일꾼과 체육과학 일꾼, 유능한 훈련감독들을 키워내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는 국내의 유일한 체육종합대학”이라고 설명
- 이 대학은 또 개교 이래 8천800여명의 체육교원과 체육전문기들을 길러내 이들이 각급 학교와 체육지도기관을 비롯한 체육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체육발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과거에 쿠바, 베트남, 에티오피아의 유학생들을 받아 들이는 동시에 집단체조와 축구, 배구, 탁구, 유도, 권투 등 여러 종목에서 수십개 국가에 체육고문을 파견했고,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총련 학생 220여명에게 권투를 지도

● **취학전 ‘재능 교육’ 열풍(8/28, 조선신보)**

- 북한 전역의 유치원에서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능과 소질을 집중적으로 개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북한의 교육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이와 관련,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6년 1월 구대홍, 김혁일 두 어린이를 직접 만나 이들의 그림 및 서예 실력을 칭찬하면서 “이 어린이들과 같이 뛰어난 수재를 훌륭한 인재로 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했었음.
- 신문은 ‘재능 교육’이 단지 소학교(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유치원 때 앞당겨 가르친다는 의미의 조기교육이 아니라 “유치원 시기가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서교육을 어린이들의 성장단계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

● **北, 조총련계도 올림픽대표로 선발 방침(8/28, 조선신보)**

- 북한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조총련계 체육인들도 북한 대표로



선발해 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보도, 조선신보는 베이징올림픽 북한 대표팀의 복귀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북한 올림픽위원회 관계자가 “대표 선발은 철저히 경기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며 “조국(북한)에서 훈련하는 선수보다 총련 선수의 기록이 더 높으면 총련 선수가 올림픽에 가는 게 우리 공화국(북한)을 위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소개

● 정권 수립 60주년 우표 발행(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우표사에서 정권 수립 60주년(9.9)을 맞아 소형전지 1종, 개별 우표 5종의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힘. 우표의 윗부분에는 국장, 인공기와 ‘1948~2008’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소재로 하는 우표도 제작

● 평양과 인근에 재선충병 확산(8/27, 연합뉴스)

- 북한의 평양과 인근 지역에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이 발생해 퍼지고 있다고 지난 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북단체 관계자가 27일 전언
- 북한 언론매체는 2007년 10월 북한 국가과학원이 곰팡이에 감염된 가지가 말라죽는 소나무류 가지마름병과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 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재선충병 발병 사실은 밝히지 않았음.

● 北올림픽선수단 평양 귀환(8/26, 조선중앙통신)

- 2008베이징올림픽에 참가했던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이 26일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통신은 “중국에서 진행된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이 26일 귀국했다”면서 “이번 경기대회에서 조선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쟁취했다”고 보도

● 북TV,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보도(8/25, 조선중앙TV)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 에너지 지원협의 제안에 무응답(8/31, 연합뉴스)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에너지 제공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7월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8월 말까지



- 마무리하기로 했던 비중유 잔여분 지원에 대한 합의도 미뤄지게 됨.
- 외교 소식통은 31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당분간 계속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우리와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유 잔여분 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 개최문제를 이달 들어 수 차례 북한에 타진했지만 반응이 없다”고 언급
-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미·중·러 등 4개국은 북핵 비핵화 2단계인 신고·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에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제공키로 하면서 이 중 45만t은 중유, 나머지 50만t은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로 지원하기로 했었음.
-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중유 5만t과 중유 약 6만6천t에 상당하는 에너지관련 장비와 자재를 제공했으며 북에 주기로 합의한 물량 중 미제공분인 자동용접강관 3천t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 조달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조선신보, 원상복구, 헛소리 아니다(8/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검증 문제로 북미 대립이 격화되면 “6자 구도가 마련한 비핵화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 “핵시설의 원상복구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의 구절은 헛소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무장해제 기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부시 정권의 말기나 다음 정권시기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조선이 미국의 위협에 대처해 핵시험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됐던 그 때의 상황이 다시 조성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없다”며 “현상 타개를 위해서는 대결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측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 北 핵불능화 작업 중단(8/26, 연합)

- 북한은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3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이던 핵 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힘. 또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성명은 “이 조치는 8월 14일 효력이 발생했고 이미 유관 측(6자 회담 참가국) 들에 통지됐다”고 함.
- 성명은 “미국이 약속된 기일 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10·3) 합의 위반이므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 북한은 지금까지 전체 핵 불능화 조치 11개 중 8개를 끝냈으며, 폐연료봉 인출과 미사용 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 장치 제거 등 3개 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었음.



나. 북·중 관계

- **北올림픽팀 中 후원사, 홍보효과 만족(8/27, 자유아시아방송)**
 - 베이징올림픽 북한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인 ‘차이나 홍싱(鴻星) 스포츠’가 북한팀의 좋은 올림픽 성적으로 인한 자사 제품의 홍보 효과에 만족해 하면서 앞으로도 북한팀에 대한 후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열어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다. 북·러 관계

- **北, 러시아 라다 승용차 도입(8/25, 러시아의 소리방송)**
 - 북한이 러시아 아브토바즈사의 라다 승용차를 도입한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25일 보도, 방송은 “아브토파즈사가 조선(북)에 라다 승용차를 공급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따라 회사는 2008년에 600대의 라다-2170과 250대의 라다-4×4를 공급하게 된다”고 보도
 - 한편 북한 당국은 최근 반일감정과 반남한감정 등을 감안해 국내에서 운행중인 일제와 남한제 차량을 다른 국가의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라. 북·일 관계

- **北 9월 초 납치 재조사 日에 전달(8/30,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개시일을 9월 초순 일본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북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보도

마. 기타외교 관계

- **라오스 총리 방북(8/30, 조선중앙통신)**
 - 부아손 부파방 라오스 총리가 30일 방북, 북한 김영일 내각 총리와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부아손 총리의 방북은 2007년 11월 라오스를 방문했던 김영일 총리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청습분간 총리실 장관과 시마행 랏사폰 농림장관, 풍사왓 부파 외무차관, 분타위 씨쑤판통 계획투자차관, 캄마니 폰쎌나 공업무역차관 등이 수행
 - 공항에는 김 총리와 리용남 무역상, 리경식 농업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리용석 내각 사무국 부국장이 나와 이들을 맞이했으며, 북한 인민군 명예위병대의 환영행사도 진행
 - 부아손 총리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 총리와 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양측은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협조공동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리명산 무역상과 켄마니 공업무역차관이 각각 서명.
- 베트남통신은 26일 부아손 총리 일행이 9월 9일까지 북한에 머물 것으로 보도했으나 조선신보는 "부아손 총리 일행이 9월 2일까지 평양에 체류한다"고 보도
 - * 북한과 라오스는 1974년 수교 후 경제 및 기술협조 협정(1974년), 항공협정(1992년), 무역협정(1997년) 등을 체결했으며 지난 6월에는 북한 주상성 인민보안상이 라오스를 방문해 동반 센가폰 라오스 내무장관과 '사회안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같은 달 강능수 문화상이 라오스를 방문해 '공동공보위원회 구성 합의서'를 조인

3. 대남정세

●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용실적 극히 저조(8/30, 통일부)

- 남북관계 경색 속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대형 남북경협사업의 신규 추진이 중단되면서 지난 7월말까지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의 약 8% 만 사용
-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7월까지 1천170억2천6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반영된 1조3천887억4천100만원의 약 8.4%에 해당
- 올해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6자회담 차원의 대북 설비지원 등 교류협력기반 영역에 483억7천800만원,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관련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지원에 266억8천800만원, 경협·교역자금 등 각종 대출에 269억1천300만원,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에 96억4천900만원, 사회문화 협력사업 지원에 25억2천700만원, 인적교류 지원에 27억2천1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7천157억3천600만원, 2006년 4천709억9천500만원, 2005년 6천744억900만원, 2004년 4천762억7천300만원 등이었음.
 - * 남북협력기금은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일반 정부 예산과 달리 기금으로 계속 축적

● 10년간 새터민에 정착금 2천400억 지원(8/28, 통일부)

-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에게 지원한 정착금이 2천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새터민들에게 지원된 정착금은 모두 2천388억3천100만원임.
-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증가에 따라 정착금 집행액도 해마다 늘어 1998년 10억8천100만원에서 1999년 27억8천3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2000년 52억9천300만원, 2001년 129억 6천100만원으로 급증세, 2002년에는 189억9천200만원, 2003년 253억7천900만원, 2004년에는 344억7천100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 가다 2005년 330억1천200만원으로 주춤했으나 2006년에 다시 345억 5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007년에는 421억7천700만원, 2008년에는 6월 말까지 281억7천700만원으로 집계

● **통일부, 원정화 대북교역사실 확인(8/28, 통일부)**

- 통일부는 탈북자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원정화가 냉동문어 수입 등의 대북 교역을 했던 실적이 확인됐다고 28일 발표, 통일부에 따르면 원정화가 운영한 정선무역은 2005년과 그 이듬해 냉동문어 17만달러 어치와 5만달러 어치를 각각 북으로부터 반입 했던 것으로 파악
- 원정화 사건 수사팀은 전날 그가 유선무역, 정선무역 등을 운영하면서 재중 보위부와 수억원 상당의 북한 물건을 거래했으며 2006년 2월 부터 올 2월까지 3억1천400만원 상당의 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

● **정부, WFP 통한 대북지원 '일단유보' 가닥(8/28, 연합)**

-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지원을 일단 유보하되, 추후 북한 식량사정 추이와 여론 등을 감안해 지원 여부 및 시기·규모 등을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개성공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8/26, 통일부)**

- 정부는 27~29일 개성공단 건축공사장의 안전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통일부가 26일 발표
- 건축사협회,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개성공단 내 각 공사현장을 돌며 안전사고 대비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

● **對北지원물자, 北, 공사 사용않고 무단 전용(8/25, 감사원)**

-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가 백두산공항 활주로 보수를 위해 남북 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지원對北지원 물자 北, 공사 사용않고 무단 전용
-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가 백두산공항 활주로 보수를 위해 남북 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지원한 20억원어치의 아스팔트 피치와 부자재를 북한이 무단 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이 25일 발표
- 감사원은 특히 “통일부 등은 부실 공사나 무단 전용 방지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북한 내각참사가 2006년 공개적으로 ‘지원 물자 중 남포항으로 운송되는 것은 (백두산이 아닌) 평양 순안공항 포장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언급
- 이 공사는 2005년 12월 관광공사의 현장 확인 결과, 아스팔트 함량



부족 등의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고, 통일부와 관광공사는 2006년 1월 다시 남북협력기금 43억9834만원으로 아스팔트 피치 8000t과 부자재를 사 북한에 건네짐. 그러나 2007년 한국도로공사의 현장 조사에서 활주로 포장상태는 2005년 12월과 달라진 게 없었고, 피치 3497t 등은 활주로 공사에 사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발표, 20억1907만원 상당의 대북 지원 물자가 활주로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무단 전용된 것으로 추정됨.

〈첨부1〉 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9.19공동성명 이행의 두번째 단계 행동조치들을 규제한 10.3합의에는 우리가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우리 나라(북한)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6월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6자나 조미(북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우리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 문제를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검증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행동 대 행동’ 원칙이다.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 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사항을 악용하여 갑자기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박하였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이란 곧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들고나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무기 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초래하였던 ‘특별사찰’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찰하겠다는 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를 골자로 하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집어 던지고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교전 일방인 우리만 무장해제시키려는 강도적 요구이다.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 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우리의 핵억제력을 놓고 흥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6자회담이 지금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함부로 농락할 수 있는 마당으로 전락한다면 그런 6자 구도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하겠는가.

미국이 이번에 우리 나라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내외에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문제를 이유로 명단 삭제를 연기한 것은 그 명단이라는 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된다.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테러지원국 지칭) 명단에 그냥 남아 있어도 무방하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다음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첫째, 10.3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이미 유관 측들에 통지되었다.

둘째,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핵검증 협상 9월말~10월초 타결 가능성” <美전문가>(8/28)

- 북한이 북미간 뉴욕 접촉 나흘만에 핵불능화 조치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해서 북미간 핵검증 협상이 실패했다고 볼 필요는 없으며 “자신들(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역제의를 미국이 받아들여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핵 협상에 밝은 미국의 정통한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이 전문가는 미 국무부가 지난 22일 북한과 뉴욕 접촉에서 성 김 북핵특사를 통해 모종의 검증 절충안을 북한측에 전달했으며 북한도 공식 반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은 영변 핵시설 내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검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측 반응 여하에 따라 성 김 특사와 그의 상대인 리 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간의 또 다른 협상 채널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음. 개리 새모어 미 외교협회 부회장은 “미국과 북한이 검증의 세부사항을 놓고 막후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핵불능화 중단 선언으로 검증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 “美, 北 등 모든 당사국과 대화 계속” <미국무부>(8/28)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의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27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을 포함해 모든 당사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이슈가 부각된 것은 처음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핵 검증 방안을 제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우리로서는 지나치게 흥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국제사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의 중단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부침과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北, 영변재가동에 1년이상 걸려” <WP> (8/27)

 -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지연을 이유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복원 검토를 선언한 가운데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선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보도.
 - 포스트는 “올 초여름에 미 정부관계자가 영변 핵시설이 외부 핵전문가들의 감독하에 실질적으로 해체됐다”면서 “이를 재가동하기 위해선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美 “불능화팀, 영변에서 계속 모니터 활동중” (8/27)

 - 미국 국무부는 26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영변핵시설에서 계속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 정부 불능화팀은 국무부와 에너지부 소속 관계자들로 구성됐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도 미국 정부 불능화팀이 영변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음.
 -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재개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먼저 핵신고 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 “中, 북핵 검증 중재안 美에 제시” <RFA> (8/26)

 - 미국이 지난 22일 북한과 뉴욕 접촉에서 북핵 검증체계에 관한 모종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북한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복수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 미국은 특히 북한과 뉴욕 접촉에 앞서 성 김 국무부 북핵특사가 방중, 중국측으로부터 중국측의 중재안을 받았으며, 뉴욕 접촉 전날인 21일 백악관에서 제프리 제임스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주재로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 등 관계기관 차관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중재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한 핵심 소식통이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백악관 대책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채 “미국측 검증안을 완화했을 중국측의 중재안에 동의했거나 아니면 기존의 검증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고만 말했다.

- “미, 검증방안 제시..北에 ‘빠른 회신’ 요청” (8/26)

 - 미국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진행된 북·미 양자회담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을 위한 이행계획을 담은 방안을 북한측에 제시했



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 성 김 미국 대북협상 특사와 만난 북측 협상 파트너는 이에 대해 ‘본국에 알린 뒤 답변을 주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김 특사와 만난 북측 파트너는 김명길 유엔대표부 정무공사로 추정됨.
- 북핵 현안에 정통한 북측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뉴욕 회동에서 미국은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비공식 6자 수석대표 회담 이후 거론됐던 검증 계획을 담은 방안을 북측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요청했음.
- 북한측이 미국의 검증방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올 경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검증 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에 알린 뒤 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검증 이행계획서 내용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中 “6자회담 참가국 약속사항 명심하라”(8/26)

- 중국은 26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및 원상복구 고려 성명과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은 약속사항을 명심하고 6자회담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은 아주 복잡한 과정이며 특히 문제점이 출현하는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라는 큰 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 대변인은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비공식 외무장관 회담을 연쇄적으로 거행하는 등 6자회담이 이전 단계까지 적극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다음 단계 준비를 위한 중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중요한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 北 전격선언에 대한 中 전문가 반응(8/26)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6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및 원상복구 고려 방침 선언에 대해 “이는 미국에 6자 회담 과정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음.
- 파오젠이(朴健一) 중국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연구소 센터장은 이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문제는 작년부터 말이 나왔으나 여전히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 조치를 미루면서 북한에 요구만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촉구성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 선스순(沈世順)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고 일본이 대북 지원에 동참하지 않는 등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한 협상용 카드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 뉴아메리카재단의 제프리 루이스 핵 및 비확산전략 실장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핵무기 확산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란 주제의 특강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결보다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 루이스 실장은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공화당의 존 매케인 대선후보 모두 미국의 기본 외교정책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다음 행정부까지 넘어갈 것이며 향후 외교정책의 극단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北 “불능화 조치 중단..원상복구 고려”(8/26)

- 북한 외무성은 26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10.3 합의를 위반했다며, 그 대응조치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10.3합의에 따라 진행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했고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 성명은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인데 “미국은 이 합의사항을 악용해 갑자기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 나라의 아무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박했다”고 지적.

● “中, 북핵 검증 중재안 美에 제시”<RFA>(8/26)

- 미국이 지난 22일 북한과 뉴욕 접촉에서 북핵 검증체계에 관한 모종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북한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복수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 성 김 특사는 중국과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0일 저녁 극소수 관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중국측은 이번 회동에서 종전처럼 미국에 좀더 신축적인 태도를 취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검증 체계안과 관련해 모종의 구체적인 권고 즉 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WFP 국장 “북한 식량사정 전반적으로 악화”(8/31)

- 세계식량계획(WFP) 토니 뱅버리 아시아 담당 국장은 29일(현지 시간) “북한의 식량사정이 지난 수년간 흉작과 국제적 지원의 급격한 감소로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을 방문중인 뱅버리 국장은 이날 미국 공영방송 NPR의 ‘모닝 에디션’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북한의 포괄적인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를 최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말한 뒤 “특히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의 식량사정은 심각해 이들을 향후 대북지원에 있어서 집중적인 대상으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 뱅버리 국장은 이어 “방북기간에 탁아소와 소아과를 방문했으며, 탁아소 관계자는 원생들이 많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부모가 식량이 부족하자 야생 식물을 뜯어다가 끓여 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면서 “북한관리도 많이 만났는데 우리가 만난 한 군(郡) 대표는 사정이 궁핍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평양에서 비행기편으로 청진에 도착한 뒤 백암군을 방문했다”면서 “백암군 방문은 국제구호단체 요원로서는 처음 방문한 것이며, 주민들도 외국인을 처음 본 것”이라고 말했다.

○ “WFP, 9월 2일 대북지원 공식 공개 요청”<RFA>(8/28)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달 2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토니 뱅버리 WFP 아시아국장이 내달 시작되는 5억8천만달러 규모의 대북 긴급 구호사업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을 열 것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방송은 말했다. 폴 리슬리 WFP 아시아 사무국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WFP가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하는 자리”라며 “한국도 과거 대북사업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요청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北, 핵보유국 인정받기 위한 전략일 수도”(8/27)

-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선언은 단순한 협상전략을 넘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해 고안된 것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더 어려운 결정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선언으로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라는 길로 나아가면서 또다른 ‘과속방지턱’에 부딪



● 美대북인권단체, 인권침해 ‘블랙리스트’ 작성(8/2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북한의 권력기관과 그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 작성 작업이 미국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에 의해 이뤄진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
- 조사 대상 북한기관에는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국경경비대, 정치범관리소 등이 포함되며, 노동당 39호실은 비자금 마련을 위해 버섯재배, 산나물 채취 등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점 때문에 인권침해 기관에 해당한다고 북한인권위측은 설명했다.
- 북한인권위는 이들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책임자들의 이름과 직책, 사진 등을 확보해 오는 2010년 ‘북한 내 테러와 강압적 권력 조직’이라는 보고서로 출간할 예정. 보고서엔 이들 기관간 상호관계, 각 기관의 구조, 활동 목적과 수단,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방식 등이 담길 것이며, 인권위측은 최종 보고서 발간에 앞서 내년에 조사 내용 일부를 개별적으로 공개할 계획.

다. 중·북 관계

● 中 외교부, 北 압박여부에 즉답 피해(8/28)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 발표 이후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음. 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6일 북한의 성명 발표 이후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음. 그는 “6자회담은 양자와 다자채널을 통해 교류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원칙을 제시하면서 “현재 6자회담 진전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 中, 7월 北무연탄 수입 폭증(8/27)

- 27일 랴오닝(遼寧)성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7월 단둥(丹東)의 다둥(大東)항을 통해 수입한 북한산 무연탄은 총 13만1천900t, 960만1천3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음. 이는 중국이 다둥항을 통해 올해 상반기(1~6월)에 들여온 북한산 무연탄 총수입량의 1.63배에 달하는 것으로 1개월 수입량으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
- 통계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다둥항을 통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량을 역산해 보면 약 8만92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웹사이트는 “올해 7월 무연탄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 전력, 철강, 화공 등 업종에서 무연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무연탄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무연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게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음.



● 中,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건설 박차(8/25)

-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중국 동북 변경지역인 훈춘(琿春)과 러시아 하산의 도로와 항만을 일체화시키고 관세를 없앤 봉쇄형 관리구역을 만들고 있음. 50억위안(7천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자유무역구에서는 상품을 면세로 수출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3국 사람과 배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 중국과 북한도 변경구역의 도로와 항구를 일체화시키고 수출가공 및 보세물류단지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지난해 7월 훈춘에 2km² 넓이의 국가공업단지를 건설했음. 이 단지에는 전자정보업과 정밀기계업, 자원가공업, 생물의약품, 신소재 업종이 입주했음. 올 들어서는 한국공업단지와 일본공업단지 건설도 허용됐음. 중국 지린(吉林)성과 한국, 일본 재계와 재계단체들이 현재 공단 건설을 위한 교섭을 벌이고 있음.
-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유엔과 동북아 각국 정부 관리들이 9월1일 창춘(長春)에서 열리는 제4차 동북아경제무역협력포럼에서 자유무역구 건설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고 지난 22일 보도

라. 일·북 관계

● “北, 내달 초 납치 재조사 일에 전달”(8/30)

-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개시일을 다음달 초순 일본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북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보도. 일본 정부는 조사 재개가 확인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가운데 인적 왕래와 항공 전세편 운항에 관한 규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측의 실제 행동을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납치문제 재조사에 대해서는 북일 양국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중국 선양(瀋陽)에서 개최된 실무자 협의에서 북한이 조기에 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를 개시해 가능한 한 올 가을까지 마무리짓기로 합의했었음.

● 日외상 “北 핵불능화 중단, 납치 재조사 영향없다”(8/29)

-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 조치가 북한과 일본의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이 29일 밝혔다. 고무라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정식으로 착수하면 대북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조사 권한이 있는 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면 조사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북한에) 약속한 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무라 외상은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핵 불능화 중단조치가) 일본과 북한의 전반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日, 北 핵불능화 중단으로 대북교섭 차질 우려(8/27)**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 전해진 26일 저녁 출입 기자단에게 “핵 포기를 위한 검증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 미국 등과도 협의해 나가겠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 연대해 북한에 중단 조치의 번복을 촉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음. 후쿠다 총리는 그러면서 대북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재조사에 영향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재조사의 개시를 향해) 착실히 추진해가고 싶다”며 북한의 핵 포기 문제와 함께 자국인 납치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
- 고다마 가즈오(児玉和夫)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6자회담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발표 이전에 관계국으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아 파악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 고다마 대변인은 북한과 합의한 납치문제 재조사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한 영향에는 “협약에서 조사의 구체적인 대응에 합의했음.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과 절충을 포함해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진전을 촉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마. 러·북 관계

● **러,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 중단 우려”(8/27)**

-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는 27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입증에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지난 7월 6자 수석 대표회담 합의 결과에 따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10월 말까지 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국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과 이전에 합의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는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참가국들의 건설적인 정치·경제적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北, 러시아 라다 승용차 도입”<러 방송>(8/25)**

- 북한이 러시아 아브토바즈사의 라다 승용차를 도입한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25일 보도. 이 방송은 “아브토파즈사가 조선(북)에 라다



승용차를 공급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따라 회사는 2008년에 600대의 라다-2170과 250대의 라다-4×4를 공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방송은 “500대의 라다-2170은 이미 조선으로 출발했고 승용차들은 안전베개와 자동유리열개를 비롯한 필요한 부품들을 일식으로 겸비하게 된다”며 “9월에 아브토파즈사는 기술봉사와 강습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조선에 파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바. 기타

● 북-라오스 총리 회담(8/30)

- 부아손 부파방 라오스 총리가 30일 방북, 북한 김영일 내각 총리와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부아손 총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라오스를 방문했던 김영일 총리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쉹 슝분칸 총리실 장관과 시파행 랏사폰 농림장관, 풍사왓 부파 외무차관, 분타위 씨쑤판통 계획투자차관, 켈마니 폰쎬나 공업무역 차관 등이 수행했음. 공항에는 김 총리와 리용남 무역상, 리경식 농업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리용석 내각 사무국 부국장이 나와 이들을 맞이했으며, 북한 인민군 명예위병대의 환영행사도 진행했음. 부아손 총리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 총리와 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양측은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협조공동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리명산 무역상과 켈마니 공업무역차관이 각각 서명했음.
- 회담 후 김 총리는 북측 주재로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연회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친선협조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북) 당과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내년 방위비 6.6~14.5% 증액 요구(8/28)

-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비율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나라당이 28일 충남 천안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소속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의 현재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까지 확대해달라며 내년도 방위비 증액분을 이 같이 요구했음.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6.6%를 증액하면 내년도 분담액은 7천904억원, 14.5%로 증액하면 8천



490억원에 이룸. 이에 우리측은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날부터 개최된 한미 양국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나. 한·중 관계

● 李대통령, 탈북자·原電참여 협조 요청(8/25)

-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교역 2천억달러를 2년 앞당겨 2010년에 달성키로 하는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또 우리 측의 요구에 따라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고 조기에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키로 하는데 중국측이 동의했음.
-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정치·외교·문화 차원에서 탈피, 군사·안보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하고, 양국 국방 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 활성화 및 상호 연락체제 강화 등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 아울러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과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양국 외교부간 1차 고위급 전략회의 연내 개최와 외교부간 실무급 업무협의 체제 정례화도 해 나가기로 했음.
-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 양 정상은 오는 201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이 2천억달러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5년 채택된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키로 했으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키로 합의했음. 이와 함께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 관광을 비롯한 양국간 교류 행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양국간 현재 연 600만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사증 편리와 조치를 포함,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키로 했음.
- 양 정상은 아울러 정부간 합의에 따라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해양경계 획정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하기로 했다.
- 양 정상은 이 밖에 ▲유엔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협조 강화 ▲한중 교류·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및 양국 정부에 관련 보고서 제출 ▲환경보호·에너지·통신·금융·물류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한 협력 등에 합의하고 외교부간 전략대화와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장관회의 등 양자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키로 했음.



- 양 정상은 에너지절약 협력 양해각서, 사막화 방지 양해각서,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운영 및 유지 협력 양해각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양해각서 등에도 서명했음.

● 한·중 군사핫라인 개통 기대감 고조(8/25)

- 양 정상은 25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기 때문임.
- 공동성명은 군사직통망 또는 군사핫라인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대신 ‘상호 연락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구가 광의적으로 핫라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성명에서 군사핫라인 개설 문제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호 연락체제 강화라는 의미 속에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이미 중국과 핫라인 개통을 위한 실무협의를 끝냈으며 양해각서(MOU) 최종안의 서명을 남겨 두고 있다”고 말했음.

● 3차 한중정상회담..긴밀한 양국관계 과시(8/25)

- 양국은 정치분야에서 양국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 방문 및 접촉을 유지하고, 외교부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연내 개최함으로써 전략대화 체제를 가동하며, 양국 외교부간 실무급 업무협의 체제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음.
- 양국 국방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 학자들로 하여금 한중 교류 및 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해 공동연구도 추진한다는 방침. 이 가운데 국방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은 여러 정치적, 외교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혈맹으로 인식하던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철저히 실용, 국익을 따지겠다는 후 주석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경제분야에선 2천억 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연도를 오는 2010년으로 앞당기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적극 검토하며, 금융·에너지·이동통신·농수산 등 주요 분야의 협력과 함께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관한 상호 협력도 약속했음.

● 李대통령-후주석, 정상회담후 공동성명 채택(8/25)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



- 베이징 올림픽 폐막 다음날 열리는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후 3개월 만에 세번째로, 양국간 관계 정상화 16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
- 회담은 북핵 사태 공조 등 대북 공조방안과 함께 양국간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 경제통상분야의 실질적 협력, 인적·문화 교류 촉진, 동북아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참고 1] <6자회담 5년> ④주요 일지 (연합뉴스, 8/25)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핵 2차위기가 촉발된 이후 주요 북핵협상 과정을 일지로 정리.

◇2002년

- ▲10. 3 = 제임스 켈리 특사 등 미국 대표단 8명 북한 방문
- ▲10.17 = 미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 발표
- ▲11.15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12월분부터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
- ▲12.12 = 북, 핵동결 해제 선언
- ▲12.21 = 북, 핵시설 봉인과 감시 카메라 제거 등 핵동결 해제 조치 개시
- ▲12.31 = 부시 미 대통령, 북핵 문제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 천명

◇2003년

- ▲ 1.10 = 북, 정부성명 통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 ▲ 2.12 =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 ▲ 4.23~25 = 북.미.중, 베이징에서 3자회담 개최
- ▲ 8.27~29 = 제1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 ▲11.21 = KEDO, 대북 경수로사업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중단 결정
- ▲12. 9 = 북, ‘1단계 동시일괄타결’ 제의

◇2004년

- ▲ 2.25~28 = 제2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 ▲ 4. 7~ 8 = 한.미.일 3자협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재확인
- ▲ 6.23~26 = 제3차 6자회담(베이징)
- ▲ 7.24 = 북 “美 제안 리비아식 선(先) 핵포기 논의가치 없어”

◇2005년

- ▲ 2.10 = 북, 핵무기 보유 선언



- ▲ 5.11 =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 ▲ 9.13~19 = 2단계 제4차 6자회담, '北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
- ▲ 11. 9~11 = 제5차 1단계 6자회담 개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공동성명 이행 의장성명 채택

◇2006년

- ▲ 1.18 =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 ▲ 6. 1 = 북 외무성,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 초청. 美 거부
- ▲ 7. 5 =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 ▲ 7.16 =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북측은 즉각 거부
- ▲ 9. 9 =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 ▲ 10. 9 = 북, 핵실험 실시
- ▲ 10.15 = 유엔 안보리 헌장 7조 의거 대북 제재결의
- ▲ 10.19 = 탕자쉬안 중국 특사 김정일 면담, 후진타오 메시지 전달
- ▲ 12.18 =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서 개막
- ▲ 12.20 = 미, 북에 '핵폐기-상응조치' 수정안 제시..북, 방코델타아시아(BDA) 선결원칙 고수
- ▲ 12.22 = 제5차 2단계 회의 차기 일정 못 잡고 종료

◇2007년

- ▲ 1.16~18 = 김계관 외무성 부상-힐 차관보 베를린 양자회담
- ▲ 2. 8 =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
- ▲ 2.13 = 6자회담 '2.13 합의문' 채택
- ▲ 3.13~14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
- ▲ 3.19 = 북, BDA 자금 동결 문제삼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불참
- ▲ 6.21~21 = 힐 차관보 방북
- ▲ 6.25 = 북 외무성, BDA 동결자금 북한계좌로 송금 확인
- ▲ 6.26~30 = IAEA 실무단 방북, 2.13 합의에 따른 북핵 시설 폐쇄·검증 문제 등 협의
- ▲ 7.15 = 북 외무성, 중유 5만t 도착 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발표
- ▲ 9.1~ 2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 핵시설 연내 불능화. 전면 신고 합의 (제네바)
- ▲ 9.11~15 =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
- ▲ 9.18 = 북 외무성,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
- ▲ 10. 3 = '9.19 공동성명 이행 제2단계 조치' 합의(베이징)
- ▲ 11. 1~ 5 = 미 북핵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
- ▲ 11.19~20 = 북.미 금융실무 회의 (뉴욕)
- ▲ 11.27~29 = 6자회담 당국자 등 '북핵 불능화 실사단' 북한 영변 방문
- ▲ 12. 3~ 5 = 힐 차관보 방북



◇2008년

- ▲ 1. 4 = 북 외무성 “美에 수입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 참관시켜..핵신고서 작년 11월 제공”
- ▲ 2.19 =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베이징서 양자회담 북핵신고 논의
- ▲ 3.13~14 =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양자회담 북핵신고 논의(제네바) 힐 ‘동시 전면신고’ 요구..“신고 형식엔 유연히 대처”
- ▲ 4. 8 =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양자회담 북핵신고 논의문제 잠정 합의 (싱가포르)
- ▲ 5. 8~10 = 북,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영변 원자로의 가동일지 전달
- ▲ 6.26 = 북,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착수
- ▲ 6.27 = 북,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 ▲ 7.10~12 = 6자 수석대표회담(베이징)..10월말까지 불능화·에너지 지원 완료 및 검증원칙 합의
- ▲ 7.23 = 6자 외교장관 비공식 회동(싱가포르)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25/0503000000AKR20080823028500043.HTML>

[참고 2] <역대 한중 정상회담 일지> (연합뉴스, 8/25)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25일 정상회담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2번째 양국 정상간 회담.

양국은 수교 이후 지금까지 상대국이나 제3국에서 거의 매년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10년간 11차례에 그쳤던 양국 정상회담은 참여정부 들어서만 8차례, 새 정부 들어서는 6개월 만에 3차례나 이뤄져 양국 관계의 발전 양상을 반영했음. 양국 수교 이후 16년간 상대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모두 9차례(한국 3회, 중국 6회)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비롯해 제3국에서 개최된 행사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음.

다음은 역대 한중 정상회담 일지.

- ▲1992. 9.28 = 노태우 대통령 방중, 양상쿤(楊尙昆) 주석과 회담
- ▲1993.11.19 = 김영삼 대통령, 미국 시애틀 APEC 정상회담 계기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회담
- ▲1994. 3.28 = 김 대통령 방중, 장 주석과 회담



- ▲1994.11.14 = 김 대통령,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PEC 정상회담 계기 장 주석과 회담
- ▲1995.11.13 = 장 주석 방한, 김 대통령과 회담
- ▲1996.11.24 = 김 대통령, 필리핀 마닐라 APEC 정상회담 계기 장 주석과 회담
- ▲1997.11.24 = 김 대통령, 캐나다 밴쿠버 APEC 정상회담 계기 장 주석과 회담
- ▲1998.11.12 = 김대중 대통령 방중, 장 주석과 회담
- ▲2000. 9. 6 = 김 대통령, 미국 뉴욕 유엔 새천년정상회담 계기 장 주석과 회담
- ▲2001.10.18 = 김 대통령 방중, 장 주석과 회담
- ▲2002. 10.27 = 김 대통령, 멕시코 로스카보스 APEC 정상회담 계기 장 주석과 회담
-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방중,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회담
- ▲2003.10.19 = 노 대통령, 태국 APEC 정상회담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2004.11.19 = 노 대통령, 칠레 APEC 정상회담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2005. 5. 8 = 노 대통령, 러시아 모스크바 전승 60주년 기념식 참석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2005.11.16 = 후 주석 방한, 노 대통령과 회담
- ▲2006.11.17 = 노 대통령, 베트남 하노이 APEC 정상회담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2007. 9. 7 = 노 대통령,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2007.11.20 = 노 대통령,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담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2008. 5.17 = 이명박 대통령, 국민 방중..후 주석과 회담
- ▲2008. 8. 9 = 이 대통령, 베이징(北京) 올림픽 참석차 방중..후 주석과 회담
- ▲2008. 8.25 = 후 주석 국민방한..이 대통령과 회담

*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25/0503000000AKR2008082508240001.HTML>

[참고 3] <한중 정상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8/25)

(서울=연합뉴스) I. 후진타오(胡錦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국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후 주석은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II. 양 정상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다대한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였고, 이것이 양국의 발전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III. 이 대통령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였다.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IV. 양측은 한·중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양자 관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2008년 5월 이 대통령 방중 시 양측이 발표한 ‘한·중 공동성명’을 기초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장기적인 공동 발전 실현을 기본 목표로 상호 협력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심화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중요 문제에 있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류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힘쓰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상대방의 평화적 발전을 상호 지지한다. 양국 간의 고위층 교류를 유지 강화한다. 양국 정부, 의회 및 정당 간의 교류와 대화를 심화 확대한다. 국방 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한다.
2. 호혜협력을 심화한다. 서로의 장점으로 상호 보완하고 호혜상생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양측 간 새로운 협력분야를 부단히 발굴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용적 협력을 통해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3.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 간 유구한 교류의 역사와 깊은 인적·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류를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적인 감정을 심화시켜 나간다.
4. 지역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아시아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제다자 무대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 인류 생존 및 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V. 한국측은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측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한국측은 대만 문제 관련, 2008년 5월 ‘한·중 공동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재천명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하기로 하였다.

VI.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정치 분야

- (1) 양측은 양국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 및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2)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제 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2008년 내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전략 대화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부 간 실무급 업무 협의 체제를 정례화하여 대외정책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3) 양측은 양국 전문 학자들로 하여금 한·중 교류 및 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양국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4) 양측은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5) 양측은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2. 경제 분야

- (6) 양측은 2,000억불 무역액 달성 목표를 201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7) 양측은 2008년 5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의 보완·수정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8) 양측은 경제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국 경제무역 협의와 무역 실무 협력체제를 진일보 강화하기로 하였다.
- (9) 양측은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금융, 물류 등 중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 (10) 양측은 상호 투자 확대가 양국의 호혜적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11) 양측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 추진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 양측은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국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간 교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정보를 교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 (13) 양측은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고용허가제 노무협력을 가동하고,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14) 양측은 금융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환영하고, 향후에도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15) 양측은 유관 정부 및 기업 간 ‘정보기술 혁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16) 양측은 친환경적·자원 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17) 양측은 지진,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18) 양측은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에너지 절약 컨설팅, 인력 교류, 기술개발 등 협력을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19) 양측은 지구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막화 방지 과학기술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사막화방지를 위한 생명공학 분야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정보교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 양측은 '무역투자정보망의 운영 및 유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정보망을 개통하여 최신 무역·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
- (21) 양측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5년 간 전자정보, 통신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앞으로 첨단기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 (22) 양측은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체결을 환영하고, 수산물수입의 검사 검역 강화, 관련 법률 정보교환, 수산물 검역을 위한 검사관 양국 상호 방문 보장 등 위생관리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인적·문화 교류 분야

- (23) 양측은 현재 연간 600만 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가일층 확대하고, 이를 위해 사증편리화 조치 검토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편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24) 양측은 2010년 및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 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 (25) 중국측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광주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측은 이를 환영하였다.
- (26) 양측은 '한·중 교육교류약정' 개정을 통해, 정부 상호 초청 장학생을 각각 40명에서 각각 6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상호 초청을 통한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27) 양측은 양국 문화계, 언론계, 우호도시, 학술계, 민간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및 언론 분야 교류행사와 역사·문화 등 분야에서의 양국 학술기관 간 교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8) 양측은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중국측은 한국측에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기로 하였고, 한국은 이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 복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지역 및 국제협력

(29)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하였다. (30) 양측은 ASEAN+한·중·일, 한·중·일 협력,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협력대화(ACD), 아시아유럽회의(ASEM),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 아시아-중동대화(AMED),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등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3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유엔업무 협의 체제를 수립하여 유엔 업무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2) 양측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3) 양측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즘 대응, 마약, 금융경제 범죄, 하이테크 범죄, 해적 등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전 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VII. 양측은 상기 분야에서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국 외교부 간 고위급 전략대화,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장관회의 등 양자협의체를 통해 구체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VIII. 중국측은 후진타오 주석 방한기간 동안 한국측이 보여준 따뜻한 우의와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2008년 8월 25일 (끝)

*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25/0503000000AKR2008082509800001.HTML>



[참고 4] 한중정상 기자회견 후진타오 주석 모두발언(연합뉴스, 8/25)

(서울=연합뉴스) 신사숙녀 여러분, 언론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갑다. 여러분께서 나의 이번 방문을 보도하느라 수고했다. 감사하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온 세상이 주목하는 베이징 올림픽이 국제사회 지지 밑에 원만한 성공을 이루었고 어제 폐막했다.

나는 이번 기회를 빌려 한국 정부와 국민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에 대해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다.

또한 나는 한국 체육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룩한 훌륭한 성적에 대해 열렬한 축하의 뜻을 표시한다.

방금 전에 저와 이명박 대통령은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고 보다 긴밀한 양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공동 인식을 모았다. 그리고 중요한 국제화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공동 인식을 모았다.

우리는 수교 16년 동안에 양국관계의 성과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양측이 정치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시키며,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에서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추진해가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

우리는 계속 고위급과 각 차원의 왕래를 유지하고 중양관계 발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유지하자고 합의했다.

양측은 양자 무역 2천억 달러라는 목표를 2년을 앞당겨 실행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고 정보통신·에너지·금융·물류·환경보호 등 중점분야에서의 호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상하이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를 잘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 이를 계기로 해 2010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2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 청소년 100명을 중국에 추가 방문하도록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한국에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기로 했고 양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 귀한 동물이 증한 우호의 또 하나의 상징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와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 과정이 변동적인 시점에 처해있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 양측은 다른 각 측과 함께 제2단계 남은 행동을 전면적으로 균형있게 이행하고 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 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본 지역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중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드릴 것이다.

나는 이 기회를 빌려 중국 측이 중앙 관계를 중시하고 양국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을 가져다주며 본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재천명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국 측이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환대와 세심 면밀한 준비에 대해 대통령과 한국 정부와 국민에 진심 어린 사의를 표한다. (끝)

*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8/25/0503000000AKR2008082516570001.HTML>